[정부 3.0]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용기있는 복지부정 신고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10
팩 스 02-2110-0678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www.krila.re.kr

지방자치실천포럼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11

November 2013 | vol.5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지방자치실천포럼 중계
– 다원주의적 지방 거버넌스의 진화
: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 포럼위원 토론 요약

특별대담 :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슈대담
– 이필용 음성군수
– 김춘석 여주시장

이달의 Issue
–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총아,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지역행복생활권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 주민수요형 행복도지수 개발을 위한 해외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이달의 Issue

지역행복생활권

04 **지방자치실천포럼**
– 다원주의적 지방 거버넌스의 진화
: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 포럼위원 토론 요약

14 **특별대담**
– 김관용 경북도지사

25 **이슈대담**
– 이필용 음성군수
– 김춘석 여주시장

36 **논단**
–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총아,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지역행복생활권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43 **해외우수사례**
– 주민수요형 행복도지수 개발을 위한 해외사례

47 **지방자치단체 탐방**
– 21세기 경상북도에서 만나는 조선의 모습

52 **연구원 동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52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 **편집위원장** 오은주 **간사** 금창호 **위원** 이효 주재복 김대욱 윤영근 김도형 **담당** 탁영지 / **연락처** T 02·3488·7300 F 02·3488·7309 / **홈페이지** www.krila.re.kr / **디자인** (주)소프트하우스

●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지방자치실천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은 지난 6월 26일에 지방자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창립하였다.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 박재창 교수, 이승종 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포럼 목적
-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철학의 공유 및 실천적 대안 논의
- 지방 현안과제에 대한 관-학-연 간 소통 및 대안모색 기회 확대

■ 포럼 구성
- 공동 대표 :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이승종(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정부(중앙, 지방)-학계-연구원 등 55인의 인원 구성
- 구성 원칙 : 지방자치 관련 학(행정학, 재정학, 지방자치 관련 주요 학회 및 대학, 언론 등)-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협의회)-연(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계에 의한 지방자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운영 방식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 7시-9시
- 중기 발전 모델 :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며 지역순회를 통한 국민 담론의 장으로 발전

■ 기조연설
- 1회 :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 2회 :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 3회 :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자치(김동완 국회의원)
- 4회 : 다원주의적 지방거버넌스의 진화(이달곤 전 안전행정부장관, 가천대학교 교수)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원주의적 지방 거버넌스의 진화



민주화는 아직까지 요원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개혁 방향이 3.0에서 국민 개개인의 요구나 수요를 맞추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방정부에 초점을 두면 개별 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통을 정확하게 하면서 지방이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자치제도를 좀 더 지역별 사정에 맞게 진척시켜야 정부 개혁의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





해볼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작업내용을 보면 대도시의 자치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치구의 구성방식이나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군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가 매우 적은데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력을 잃은 것을 알 수 있다. 10년 뒤의 시점을 봤을 때에는 인구가 매우 줄어들어 있을 곳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한때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지는 등의 노력을 해봤지만 이렇게 고착된 환경에서 일시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해당 주민이 진심으로 요구하는 것을 알아서 다원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으로 가보면 조그마한 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행사가 너무 많은 것이 흠인데, 이러한 행사가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개인적으로 반 이상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과 같은 사무적인 일처리는 집약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 굉장히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그래서 과연 주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군단위를 보면 인구가 적은데 직선을 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의 경우에는 현재 인구 규모에 따라 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명예직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은 미국의 도시 매니저처럼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 것 또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외부 네트워크를 끌어와서 지방이 더욱 활기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에 산적되어있는 문제에 있어 전문가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욱 더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지역을 생활단위로 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적으로 상호위탁이라든지 협약을 통해 하나의 행정과 비슷하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복지와 같은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나라는 초중앙집중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획일적인 정책을 통해 지방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행정적 통합을 통해 다원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세재부분도 손을 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사업소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사업소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소자치구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합시와 통합시는 아니지만 수원과 같은 대도시들은 광역시와는 다른 새로운 지위가 필요할 것이다. 재정적으로 거의 광역시와 가까운 재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주어야만 통합이후에 생기는 복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대도시 혜택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방안이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주변의 넓은 부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도시와 그 주위는 거의가 1일 생활권인데 18세기의 고전적 자치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도의 기능을 사실상 대도시들이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 행정적 능력을 갖추어 실행한다면 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과소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몇 개의 소수 기능만을 가지고 광역행정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러한 다원화가 진척되는 구상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살면서 어느 시스템이 효과적인가를 행정의 다원화를 통해 국민들이 마치 시장에서 메뉴를 고르듯이 고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계나 포럼 등에서 그 접근법에 대한 구상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행정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만 고생하기보다는 Backward mapping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ackward mapping이란 현재 개선을 해야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법과 제도를 어떻게 고칠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추상적으로 개념을 잡아서 이러한 것을 해보자 또는 공모를 받아보자라는 식을 한다면 임기 내에 어떠한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행정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개편은 투표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지역 단체장과 유지, 언론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생겨야 할 것이다.

포럼위원 토론 요약

박우량 신안군수



지방자치가 2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은 이해 당사자들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바뀌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변화가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포럼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만이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방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임광원 울진군수



작금의 행정은 너무 경직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규제 속에 너무 가두어 두어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2002년즈음에 공무원 감축이 있었는데, 그 정원이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증가된 지금 증원이 되고 있지를 않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교부하여 정립된 기준을 통해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바뀌기만 해야한다는 강박증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순서상으로는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변화는 좋은 것이고 고정된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일을 진행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원화라는 것은 매우 지난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 행정의 유연성과 같은 쉬운 것을 먼저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참여와 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성이 행정 영역의 논의에서 상층부에서만 논의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접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논의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분권이나 균형발전과 같은 철학적 부분이 공유가 되고 담론으로 확산될 때 개편에 대해 좀 더 밀접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광국 한국행정학회 회장



지방 3.0과 지역 거버넌스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 3.0은 협업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이론적 틀을 만들어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결국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윤수 한국정책학회 회장



지방 자치 현재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답함이 느껴진다. 진단과 해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지방 단체장 분들의 입장에 대한 논의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호철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도시계획을 할 때에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지방은 자치 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지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면 더 많은 폐단이 생겨나는 문제 등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애초에 규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지방 자치에서 국회의 역할과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방 자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현재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너무 한 곳에만 몰려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부 3.0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을 보면 관련자들만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자금 또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

고 있는 것이 많은데 정부 3.0에만 매달려서 생기는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지방행정체제의 다원화는 예로부터 많이 고민해왔던 문제이며 그동안 너무 획일적이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다른 것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어떠한 형태의 행정체제가 되든 스스로의 재원으로 스스로 살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다양성은 좋은 이야기인데 국민들은 이것을 해줄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낭비, 선심, 그리고 난개발 등의 다원화의 역기능들이 부각되는 경향이 많다. 국가적인 시각에서도 지방은 절약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국책 연구기관의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만 몰고 가다보니 부정적인 여론만 보여지는 것 같다. 그러므로 여태까지의 방식을 조금 탈피해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의 획일화에 대해서는 수용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지 지자체별로 따로 시행해도 문제 없다. 오히려 이것은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광주시와 신안군 공무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광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합격한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져서 문제가 된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그러한 방법을 쓰시면 될 것이다. 이렇듯 획일화된 제도 속에서 자율적인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대담 김관용 경북도지사

일자리 창출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경상북도

주재복 연구위원 :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 민선 4기와 5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 7년 동안 경북도지사로 재임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김관용 지사 : 먼저 우리 경북도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년간 항상 도민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때론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 풍랑을 헤치기도 하였고, 순풍에 희망을 실어 나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민께 희망을 안겨 드리고, 미래 세대가 먹고 살 기반을 준비해온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도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걱정 없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만들고, 지역에 사람이 모이며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걱정 없이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 취직 걱정 없는 경북을 위하여 일자리 만들기에 전행정력을 올인하였습니다.

조직을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로 투톱(TWO-TOP)체제로 재편하였으며, 민선5기 목표를 투자유치 20조원, 일자리 22만 개로 설정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청 공무원들이 절박한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자는 뜻으로 도청정문에 '취직 좀 하자'라는 도정구호를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경북하면 '일자리'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각종 일자리와 투자유치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미래 30년 먹거리인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 동해안에 있는 1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바탕으로 연구, 산업, 인력양성, 안전을 집적화 해서 클러스터로 만드는 13조 5천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래 블루골드 산업인 '물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세계물포럼'을 유치하고, 이를 통하여 물산업 기술의 집적화로 세계 최첨단 물산업 인프라 구축과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기초과학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으며 최신의 3·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양성자 가속기를 구축하였으며, 세계적 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과 아울러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4개 분야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L자형 국토개발 계획을 U자형으로 전환시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동해안 지역에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FT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농업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로 키워낸 것과 함께 추진한 대한민국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문화국가로 인정받은 것이 도민과 국민의 자존을 세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세계화는 가난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정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고 가장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도정비전을 "취직 좀 하자! 일자리 경북에서!"로 설정하시고,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 등 분야별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경상북도의 핵심비전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김관용 지사 :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마지막엔 항상 자식 이력서 주면서 취직부탁을 합니다.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자식 취직입니다. 도지사 다른

것 좀 못해도 취직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경북도의 핵심 비전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정 구호도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로 정하고, 도청 입구에 “취직 좀 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도지사 책상에는 항상 일자리 실적이 놓여 있었고, 모든 사업은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전략은 투자유치입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경제가 살고 취직자리가 늘어납니다. 민선5기 투자유치 목표도 20조원으로 하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과 신 성장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산해(江山海)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북의 신발전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완성을 통하여 700리 낙동강 수변 레저 문화지대의 조성으로 국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백두대간, 낙동정맥에 산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주민 소득원을 발굴시키고, 천리 동해안에는 해양물류 기반을 조성하고 마리나항을 비롯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여 경북을 통하여 환태평양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도의 최대 장점인 IT산업을 기반으로 한 IT융합산업을 육성하여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 항공전자부품단지, 극한로봇 허브조성, 첨단섬유산업, 생명산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과 기술을 집적화 시킬 계획입니다.

경북의 또 하나의 핵심은 문화입니다. 세계화 시대 문화도 결국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우리나라 전통과 현대 문화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종합 문화콘텐츠이자 대한민국 명품문화브랜드입니다. 이스탄불과 경주는 세계사적으로 흔치 않는 천년 고도로서 양도시가 가진 다양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문화의 융합을 시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유럽과 아시아, 불교와 이슬람의 만남이 엑스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향후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종가문화 명품화’ 프로젝트, 세계유산 보존 선양, 문화유산 국제공인 추진,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 전개와 3대문화권 문화 ·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을 통하여 ‘문화융성’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터키에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왜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주요 행사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용 지사 :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23일 동안 ‘길, 만남, 그리고 동행’ 이라는 주제로 동 · 서양 문명의 교차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이스탄불시가 공동 주최한 이스탄불 엑스포는 양국 문화관광부와 유네스코, UNWTO(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 등 18개 기관이 후원하고,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40개국이 참가한 ‘범국가적 지구촌 문화축제’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신라를 비롯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세계문화가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세계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전시, 공연, 영상, 체험, 특별행사 등 8개 분야에서 46개의 문화행사가 이스탄불시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IT강국 한국의 현재를 함께 보여주는 ‘한국문화관’, 신라를 비롯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낸 ‘한국 대표작가 사진전’과 최근 싱가포르에 수출해 국제적 흥행에 성공한 넌버벌 공연 ‘플라잉’ 등을 통해 경북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였습니다. 또 한류 붐 확산을 위해 터키-한국 영화주간, K팝 공연, 비보이+퓨전 공연, 태권도시범단 공연, 전통문화체험 등의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지구촌 문화 화합을 위해 실크로드 바자르, 세계민속공연축제도 열렸습니다.

23일간의 기간 동안 487만명의 관람객이 이스탄불 엑스포를 다녀갔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1998년에 처음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의 관람객으로 2006년 앙코르-경주세



계문화엑스포 45만명의 10배가 넘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전 세계인이 한국문화에 열광하고 코레열풍을 불러일으킨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저도 언론의 통해서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용 지사 :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대표 명품문화브랜드로 국내 개최에만 머무를 순 없었습니다. 2006년 지자체 최초로 세계로 나섰습니다. 문화행사 수출 1호, 그 첫발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문화의 큰 축인 유럽으로 그 지평을 넓히기로 하였고, 세계 문명사의 중심지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전통문화와 한류확산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한류인 K-POP,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한국전통문화체험, 민속공연, 국악, 태권도 등)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전통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문화 원형질을 담은 전통문화와 한류를 위시한 대중문화가 서로 만나 융복합될 때 우리문화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탄불 엑스포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를 더욱 지속시키고 확산시킬 비전과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엑스포를 통하여 실크로드의 시작점이 경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개막식에서 "경주는 실크로드의 시작점이고, 이스탄불은 실크로드의 끝 지점이다. 이 역사적인 두 도시는 동쪽과 서쪽의 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실크로드를 재창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엑스포 사전행사로 '실크로드 탐험대'가 경주를 출발해 중국 시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이란 이스파한을 거쳐 터키 이스탄불을 탐험했습니다. 실크로드 상의 국가들과 역사적 · 문화적 교류를 재조명하고, 자매결연 · 우호교류 협정 체결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향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역시 실크로드 국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이스탄불 엑스포와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21C 문화실크로드'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키워드에서 보듯이 21세기는 문화융성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문화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라는 이름표를 달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가 터키를 찾았으며, 상당히 송공했습니다. 지자체가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당당히 진출하는 '창조 지자체', 지방이 국책을 이끈 대표적인 표본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2011년 양국 교역규모는 58억 8900만 달러입니다. 터키는 2010년 OECD 경제성장률 1위와 2012년 세계 17위의 경제규모로 성장잠재력이 우수합니다. 올해 5월 발효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양국의 경제적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삼성, 현대, LG 등 우리의 60개 기업이 터키에 진출해 있는데, 이번 엑스포를 통해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탄불 엑스포 연계행사로 열린 '세계일류 한국상품전'에는 터키, 중동, 동유럽 등 250여개사의 기업들이 참가해 총 1,3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경상북도의 브랜드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명실 공히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과 소프트파워의 중심으로 각인이 된 것입니다. 문화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친한(親韓) 분위기 확산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하여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주민행복 달성을 위한 지방3.0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지방3.0과 관련된 경북도의 계획과 추진 전략,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김관용 지사 :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정부3.0 비전선포'를 한 자리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참석하여 "정부3.0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현장에서 발 벗고 나서겠다"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정부3.0이 언급된 직후,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도정 추진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3.0 이 지향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항상 그 기저에 두고 추진해 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새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여 투명한 국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지자체가 그저 뒷짐 지고 따라갈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경북에서 주도해서 16개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어 지방3.0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이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3.0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입니다. 우선 정부3.0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책적으로 엮어 나갈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추진과제 발굴에 역량을 모았습니다. 정부3.0 비전 선포 직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도 본청과 시 · 군차원에서 보고대회를 열어 123개 실천과제를 발굴 ·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3.0 핵심리더를 지정하고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정부3.0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북의 이런 노력을 중앙에서도 인정해서 지난 6월 안행부가 전국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부3.0 실천계획을 평가한 결과 경북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고,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서 경북이 벤치마킹 지자체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3.0의 개념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었다면, 이제는 정부3.0의 이념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때입니다.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형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는 많지만, 경북에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명한 도정추진을 위해 행정에 민간 등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협력체계 구축하고



또한 행정분야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능한 도정구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업클라우드시스템, 해양 · 산림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그밖에 주민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복지와 투자유치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도청이전에 발맞추어 도시통합관제센터를 두어 행정, 교통, 환경, 복지 등 도청신도시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의 행정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만족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3.0이라고 하면 경북3.0이 선도모델로 소개되어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우리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살기좋은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최근 들어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이 저개발 국가에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성과는 무엇입니까?

김관용 지사 :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농촌근대화운동으로 가난극복의 상징입니다. 21C의 새마을운동은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모델로서 국제사회에 기

여하는 원조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잘 살아서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 극복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자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UN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탄자니아와 우간다에 한국형 밀레니엄빌리지를 조성하고 있고, 2010년부터 탄자니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인도, 필리핀 등 5개국 15개 마을에 새마을봉사단을 파견하여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들을 훈련시켜 해외봉사 전선에 투입하고 있고 해외 지도자를 불러들여 새마을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초 새마을세계화 재단을 설립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는 외교부, 국내는 안행부, 현장은 경북도, 교육은 영남대와 경운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 간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ODA의 표준 모델로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3일 반기문 UN사무총장 및 주한 외교단 100여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대한민국 가난극복 사례로 발표한 새마을세계화 사업이 참석자들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반총장께서도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Mr. 새마을'로 불리고 있으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세계화사업이 한국형 ODA 모델로 지구촌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봉사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고자 합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지방자치와 지방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관용 지사 : 지난해 10월부터 제6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아 지방자치 정착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20년 가까이 민선현장에 있으면서 허울뿐인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돈, 권한, 결정권 모두 중앙이 틀어쥐고 지방은 '2할 자치', '무늬만 자치'가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는 이제 시대적 요구입니다. 중앙 중심의 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지방 중심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권적인 운영체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헌법까지 바꾸어 가며 강력한 분권화를 추구하여 지방정부를 국가 발전의 신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성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실질적 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방안을 3대 분야 12개 과제로 제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재정, 분권, 균형의 3대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노력의 결과, 뿌리 깊은 중앙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방의 역량을 인정하여, 권한은 과감하게 주고, 또한 책임도 강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보람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지방, 정부의 삼각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 나아가 분권형 개헌까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재정에 있습니다. 지방은 지역개발과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지방자치 시작 전에 비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과 자율재원의 확보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뜻에 따라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재정확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확대 및 취득세 영구인하 결정은 지방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전 시·도가 연대하여 지방이 단순한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 할 때에는 먼저 지방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지방이 납

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또한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구축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만나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제도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지방에 살아도 사람대접 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재복 연구위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안전행정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분권과 지방개혁,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및 컨설팅,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 낙후지역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관용 지사 :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1984년에 설립되어 30돌을 맞이하는 유서 깊은 연구기관으로 어느 기관보다 지방을 잘 이해하고 지방의 아픔을 함께해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국민의 지지와 관심,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노력이 지방자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숙한 지방자치에서 성숙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은 어쩌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서구와 달리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지금 지방자치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자치단체이지만, 이론적, 학문적 토대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활발한 정책연구를 기대합니다.

대담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슈대담 이필용 음성군수

활력 있는 복지를 실현하는 음성

조석주 연구위원 : 취임하신지가 엊그제 같은데 민선5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끄시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는데 주요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필용 군수 :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취임 초부터 음성군의 100년 번영 기틀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의 가치를 활용해 음성군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교육랜드 조성사업 용역을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 반기문 총장님 고향인 상당1리를 청소년 교육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의 지역적 특성인 농공병진 군으로 농업과 공업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인 고추, 복숭아, 수박, 인삼, 화훼 등 5대 명품 특산물 육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부권 최대의 거점화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인삼 얼굴을 찾기 위해 인삼유통센터와 인삼직거래 판매소를 건립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또한 충북혁신도시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미래형 친환경 생태도시로 건설될 혁신도시는 인구증가와 도시인프라 확장으로 음성군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임기 중에 무엇보다도 교통인프라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음성군 지역이 발전되려면 물류 유통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개선인데 올해 8월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지난해 말 21번 국도 개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군(기업체 1,900업체)이 되기 위해 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민선5기 동안 총29개사에 1조 4,870억원과 고용인원 5,526명 등 투자유치의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남산업단지가 지난해 말 부분 준공되었고 생극산업단지가 기공식을 했으며,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이 동서고속도로를 따라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군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좋은 우량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유촌산업단지와 리노삼봉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생산업체가 집적 이전하는 협약체결 등 불경기에도 음성군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임기동안 인구 9만 명 돌파로 도내 인구증가율 1위를 지속할 만큼 음성군은 발전 호기에 있습니다. 많은 인구유입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건설과 신규 아파트 및 체육시설, 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완했습니다. 음성군은 외국인 인구를 포함하여 현재 약 99,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1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 산업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 음성군은 고속도로가 3개가 지나고 2개의 고속국도가 예정되어 있는 등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쉬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이 입주해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투자 1번지'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조석주 연구위원 : 음성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음성의 미래발전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필용 군수 : 음성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쉬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음성청결고추, 햇사레복숭아, 다올찬수박, 음성인삼, 화훼 등 명품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천혜의 환경의 기반으로 군수로 재직하는 기간에 음성의 100년 먹을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반기문 교육랜드를 조성해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120만 평의 태생산업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온 열정을 쏟을 생각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2020년 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주 연구위원 : 음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주변 여건과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산업단지 건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필용 군수 : 음성군은 혁신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잠재력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에 청정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주변여건과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가 음성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국도 5개 노선, 지방도 9개 노선이 지나고 청주국제공항과 2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 · 항공 · 철도망의 3박자를 모두 겸비한 전국에서 가장 발달된 중부권 위성도시의 잠재력의 우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원남산업단지, 생극산업단지,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기울였으며, 입주를 미루는 기업체의 조기 입주를 유도하는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21번 국도 개통과 함께 금왕 유촌산업단지와 삼봉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전 하겠다고 MOU를 체결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업체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으로 음성군에서 평택항까지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입지 조건이 좋아 많은 기업체들의 입지 선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건설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생극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태생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속히 수도권 이전 업체와 국내로 회귀하는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단위 산업단지 개발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비록 현재 태생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과 다소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있지만 태생산단의 개발 당위성과 음성군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논리적으로 접근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은 민선5기 기간 중 투자유치 성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29개 업체 1조4천87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 내어 5,526명의 고용창출효과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조석주 연구위원 : 충북 음성이 고향인 세계적인 지도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가치를 활용한 음성군의 성역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군수 : 반기문 총장님의 생가를 복원하고 인근에 200㎡ 규모로 기념관을 지어 2010년 1월 개관했습니다. 천진난만한 표정의 어릴 때 장면을 비롯해 일대기를 볼 수 있는 사진 40여 점과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자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가 마을을 중심으로 한 1만459㎡의 터에 '반기문 평화랜드'를 조성했으며, 음성읍 신천리의 36번 국도 700m 구간의 4차로 중앙에 반 총장과 음성을 상징하는 조각품을 설치하고 소나무 등으로 조경해 '반기문로(路)'로 명명했습니다.
반 총장님이 태어난 행치마을과 보덕산에 얽힌 전설 등을 스토리텔링한 '반기문 비채길'도 지난해 말 완공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지구 조형물, 역대 유엔사무총장 흉상, 세계 160여 나라의 국기 게양대 등을 갖춘 2만8300여㎡ 규모의 유엔 반기문 기념광장 조성, 반기문 기념관을 확대 조성하고 반기문 교육랜드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음성군은 매년 반기문 마라톤대회, 반기문 전국백일장 등 반 총장을 소재로 한 문화 · 체육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반 총장님이 고등학생 시절 미국을 방문해 케네디 대통령을 예하고 외교관의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해마다 유엔 방문단을 구성해 반 총장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조석주 연구위원 : 끝으로 민선5기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취임 당시 군민들과 약속했던 공약 이행률과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군수 : 민선 5기 군수에 취임하면서 5개 분야 41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중 8건이 완료됐고 전체 추진율은 85%를 달성했습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임기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분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약사업 41건 중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박람회 개최 등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고 모든 행정은 군민으로부터 시작하고 군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신념 아래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지만 남은 기간 동안 현안 사업을 점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10만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대담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슈대담 김춘석 여주시장

118년 만에 여주시 승격, 제2의 남한강 기적 이루자



김도형 연구원 : 여주가 118년 만에 시로 재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김춘석 시장 : 지난 9월 23일 여주시 승격 기념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셔서 시 승격의 기쁨을 함께 하고 앞으로 여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순탄치 않은 시 승격 과정을 극복하고 1만여 시민들이 세종로 거리를 꽉 채우고 축하의 함성을 들었을 때에는 무척 기쁘고 한편으론 매우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 승격은 여주의 비상을 위한 작은 날갯짓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초대 시장이라는 명예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기에 저는 더 설레고 힘이 납니다. 물론 부담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향후 여주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앞섭니다.

김도형 연구원 : 초대시장으로 여러 가지 챙기실 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 출범 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춘석 시장 : 일단 그 동안 시 출범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주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화합하고 하나 된 여주시여야만이 이제 갓 출범한 여주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 승격 달성이라는 외적인 목표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는 여주시에 바라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바람을 정책으로 펼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좀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립 중인 '여주시 비전 2025'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큰 목표로 삼고, 그에 따른 심도 있는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액과 맞물려 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2년간 여주시 발전을 위한 총체적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2, 3년이 지난 후 주민들이 "그때 시로 바뀌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도형 연구원 : 여주시가 도 · 농 복합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인구 늘리기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춘석 시장 : 여주시가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건실한 기업들이 여주시로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주민들 의견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주에 인구가 늘고 기업유치가 활성화 되려면 도로 교통망, 산업단지개발 등 많은 자본이 투입돼야 합니다.
다행히 여주는 이미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성남~여주 복선 전철이, 2016년에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됩니다.
최근 개통된 남여주, 서여주, 북여주 인터체인지와 더불어 여주의 교통 인프라가 인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조성 사업을 활발히 펼쳐, 강천일반산업단지 6개 블록 중 5개 블록은 이미 분양을 마쳤고, 삼교일반산업단지가 올해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사전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 승격으로 농촌으로 인식되던 지역 이미지도 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여주 발전의 큰 그림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유치도 강소농 농업정책처럼 작지만 튼실한 기업들을 여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이 안 된다면 굴뚝 없는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가 높은 강소 기업들을 여주로 오게 하는 전략을 구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여주와 동여주 IC 인근에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유치 시책과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펼 계획입니다.
또한 여주에는 국보 제4호 여주고달사지 승탑, 보물 18점 등 83점의 다양한 문화재와 강천보, 이포보, 여주보 그리고 썬벨리 호텔 등 과거와 현재 어우러진 훌륭한 문화 ·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접근성도 더욱 좋아져 매력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관광산업이 침체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각각의 문화재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가볍게 올 수 있는 나들이 장소에 더해 교육과 학습의 장소로, 체류





형 관광도시로 여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기존에 문화재 1점이 그 하나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스토리텔링을 통한 접근 방법은 문화재와 문화재, 장소와 장소 융합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상호 협력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하여, 여주의 문화재, 볼거리, 먹거리가 하나의 큰 주제로 확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기업유치와 함께 향후 여주의 튼튼한 경제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도형 연구원 : 올해는 민선 5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해입니다. 성과와 가장 큰 보람을 꼽으신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춘석 시장 : 여주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과거의 패쇄적이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지역 정서에서 탈피해 여주가 여전히 기회가 많고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역 정서로 변모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시 승격도 그러한 일환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시 승격 자체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여줬던 열정과 자부심,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여주의 주인은 바로 여주 시민입니다. 지역의 주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 한다면 여주시의 공무원들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초기부터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를 시정방침으로 정했고 인근 지자체에 여주보다 더 일 잘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행정 시스템이 있으면 제가 직접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도 과감히 도입하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와 상관없이 100% 아니, 200% 만족할 수 있는 시민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나, 임기 3년 동안 꾸준히 해온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그래도 예전보다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에서 어려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자주 듣고 있어 저를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도형 연구원 : 끝으로 여주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춘석 시장 : 지난 1년여 동안 애써주시고 양보와 이해로 시 승격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11만 여주시민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주시 출범은 특정한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모두를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시청 공무원들만 좋아진다, 나와는 아무 상관 없는 남의 집 잔치 아니냐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시 승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동 지역 주민들의 면허세, 등록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세금이 올라가는 부담을 안게 되지만, 먼 안목에서 현재의 여주시를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 승격을 통해 확인한 주민들의 열정과 현재의 발전 상승 기류를 타고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주신다면 여주는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긍정적으로 여주시 승격을 본다면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이 여주시 발전이라면 시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타도 괜찮습니다.
제2의 남한강의 기적을 이제부터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담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총아,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내용



박성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

1.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도입 배경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지난 7월 18일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는 지역희망프로젝트, HOPE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어서 지난 11월1일에는 HOPE 프로젝트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HOPE 프로젝트는 대형 SOC 사업이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과 희망을(Happiness) 체감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있겠지만, 적어도 새 정부에서는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교육 · 문화 · 복지서비스 등을 주민체감 행복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기회(Opportunity)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나 개별 지자체 단위의 나홀로 접근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교통 · 통신의 발달 등에 따라 주민의 행정수요와 생활이 기존의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 생활권 단위로 이루어고 있고,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수요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공간적 범위를 생활권 단위로 확대하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웃 시군간의 상생협력 및 중앙부처의 종합적 지원체제를(Partnership)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이러한 상호 협력체제를 통해 주민들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 문화 · 복지서비스를 생활권 어디에 살든지(Everywhere) 골고루 불편 없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화장장은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타 시군의 화장장 이용 시 요금을 5~10배 정도 지불해야 하거나 이마저도 화장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자주 왕래해야 하는 데도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시외요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불편도 많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실제 수요와 생활기반은 기존의 시군 경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데, 그간 우리 행정과 각종 사업은 시군 내부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면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활용하거나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투자 등을 통해 지자체간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주민입장에서는 기초인프라, 교육, 문화, 의료 · 복지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존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내용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간 연대를 통해 생활인프라, 일자리 및 교육 · 문화 · 체육 · 복지서비스를 불편 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지자체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2개~4개 정도의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다. 개별 지자체는 인근 시군과의 통근 · 통학률,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3개의 생활권 유형을 제시하였다. 인구 10만 명 전후의 농어촌 시 또는 군으로 구성되는 농어촌생활권, 인구 50만~10만 명 전후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와 중소규모 도시가 연접한 지역은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다.

유형별	인구규모	연계성 기준
농어촌 생활권	10만 명 전후의 시 · 군	▷(접근성)통근율 · 역통근율 · 통근량 비중,이동시간, 통학권,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권
도농연계 생활권	중심도시 10~50만 명 전후	▷(기능적 연계) 산업, 관광, 물류, 로컬푸드 등의 전후방 연계성 ▷(지리적 연계) 연접성, 수계 · 산 등 자원 공유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 50만 명 이상	▷(기타) 역사 · 문화적 동질성, 주민들이 인식 · 희망하는 협력적 생활권 등

* 다만, 인구기준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지역 내 중심성, 주변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권 유형 탄력적으로 적용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의 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적극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생활권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관련 부처와 함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는 이미 정부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만큼 생활권협력사업 예산(14년 650억 원)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 · 지원하고, 15년부터는 생활권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광특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으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15년 예산 편성 시 생활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구성 및 관련 사업 발굴이 14년 2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준비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많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예시)〉

분야	관련사업(예시)
생활권 기반확충	상하수도 · 혼잡도로 개선 등 생활인프라 공동 조성 · 이용 통합적 대중교통운영체계 구축 등 연계교통서비스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등 환경 시설 공동 설치 · 운영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주민직업교육 공동 운영, 도농간 일자리 매칭 생활권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노후산단 재정비 등
교육여건 개선	생활권내 학생 등하교 편의를 위한 학교군 조정 통학버스 운행 노선 확대,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문화 및 생태	공동의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행사 공동 개최 숲 가꾸기 등 병충해 공동 방재, 하천 및 어장의 공동 보전 · 관리
지역 의료 · 복지	생활권 단위 거점 복지센터 운영, 도시병원 연계한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전문 서비스 인력 공동 활용 등

역대 정부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종전 개별 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분절적 행정 및 예산사업 추진방식을 통합적이고 협력적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들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이해하고 마인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고, 부처간 협업 속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11월부터 국토부, 안행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T/F"를 가동하고,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역행복생활권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존의 권역과 어떻게 다른가

박근혜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을 지역발전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이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에 요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두 가지 사정과 관련성이 많아 보인다. 하나는 2만불을 넘어서고 있는 1인당 소득 수준이다.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니, 무슨 이야기일까.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 (Easterlin' s Paradox)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린이 밝힌 이 이론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2만불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소득의 증가가 개인의 행복증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증가하기 어려운 행복의 증진을 개개인이 사는 현장에서 체감성이 높은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의료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삶의 질 제고나 주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요소들을 인근지역과 협력해서 공급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이들을 설치, 공급한다면 투자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서비스를 분담해서 공급하고 나누어 쓰겠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존의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과는 어떻게 다를까. 종래 시 · 도로 구성되었던 광역경제권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 선도산업 및 광

역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또, 기초생활권은 광역경제권 중심의 정책추진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 군의 각기 행정구역 단위에서 지역의 개발과 생활기반 확충을 도모했었다. 그러나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행복 및 지역경쟁력 증진을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생활권을 구성하고 주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의 의사에 따라 공동발전의 권역을 구성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권역들과 다른 점이다.

〈 지역행복생활권과 기존 권역과의 차이점 〉

구분	종 전			변 경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지역행복생활권
목적	*글로벌 지역경쟁력 제고	*기본적 삶의 질 보장		*주민행복 + 지역경쟁력 증진
권역 설정	*정부 주도 *인위적 권역 설정	*정부 주도 *인위적 권역 설정	▶	*지자체 자율 *생활권 반영 자율적 설정
권역 단위	*2~3개 시 · 도 하나의 광역경제권 지정	*시 · 군 단위로 기초생활권을 설정		*주민생활, 서비스 이용 연계 *복수의 시 · 군
추진 기구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없음	▶	*시군(자율적 협의체) *시도(조정 · 지원지구)
중점 분야	*광역선도산업 육성 *선도산업 인력양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개별 시군단위의 지역개발 및 생활기반 확충		*생활권 주민체감 사업 추진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육성 *산업 · 교육 · 문화 · 환경 · 복지 · 의료

출처 : 지역위, 2013. 11.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2.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원칙과 추진단계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추진은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지역생활권 구성의 단계이다. 여기서 원칙과 기준이 문제가 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생활권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2개 이내 생활권에 중복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되, 인구 및 접근성 뿐 아니라 기능적, 역사적 연계성 및 주민의 정서 등을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광역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도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성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계획수립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까지이며,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에 참여하는 시 · 군 전체가 공간적 범위가 된다. 계획의 내용은 생활기반 확충,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 의료 등 5대 분야 중 지자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시설 공동이용, 연계교통 확충, 학교군 조정,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등 협력사업,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이 아닌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 중 지역에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시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계는 이렇게 수립된 계획을 복수의 지역이 추진하는 단계이다.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로 구성되는 협의체 외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각기 지닌 기능을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절차〉

1	지역생활권 구성	– 지역위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협의체 구성 – 생활권 구성안 마련
▼		
2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 생활권 사업,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주민 의견수렴, 광역지자체 협의 –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 시 · 도 발전계획 반영
▼		
3	지역생활권 사업추진	– 발전계획 사업에 대한 시 · 도, 중앙부처 지원 – 지자체 시너지 효과창출 – 상호기능적 연계 및 분담

출처 : 지역위, 2013. 11.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3.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① 그런 다음 해당지역의 생활권 구성 여건 및 잠재력을 검토해야 한다. 주민의 행복증진에 필요한 요소 검토를 바탕으로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연접지역과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권의 얼개를 짜야 한다. ② 그 다음에는 관련 지자체로 지역생활권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때 다양한 유형의 협의체 장 · 단점을 검토한 다음 가장 적합한 유형의 생활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 도 경계를 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참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협의체는 생활권의 컨트롤 타워로서 생활권 설정, 협력사업 발굴, 공동발전 목표와 비전 설정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③ 그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해야 한다. 생활권을 구성할 때는 인구뿐 아니라 지자체 간의 연계성 및 협력의지, 주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시 · 도는 지자체 협의체가 생활권을 구성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생활권의 발전성과를 제고하고, 시 · 도 발전과의 정합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④ 그 후, 생활권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자체 공동으로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의회보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협력추진 사업뿐 아니라 지자체 합의하에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획안에 첨부해 둘 필요가 있다. 계획수립 시에도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되, 타 광역 지자체와 관련되는 계획의 경우, 관련 시 · 도 간의 협의도 필요하다. ⑤ 광역 지자체는 시군구가 수립한 생활권 발전계획을 시 · 도 계획에 반영해서 「시 · 도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수의 시 · 도가 관련된 계획의 경우, 해당 시도발전계획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 ⑥ 마지막으로는 수립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역행복생활권 구상 및 계획 수립, 사업추진 시 시 · 도 및 시 · 군 단위에서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 조정 등을 위해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생활권발전협의회' 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수요형 행복도지수 개발을 위한 해외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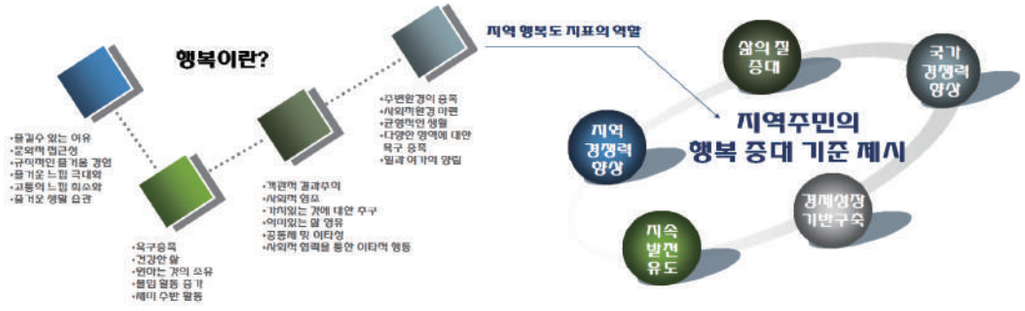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행복도지수 개발 배경

최근 행복 및 행복도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의 행복 및 행복도에 대한 개념 정립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행복 및 행복도는 객관적 및 주관적 지표를 활용한 종합지수를 산출하여 주민의 수요와 정부의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단순한 지표 및 지수의 공표가 아닌 현실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지수 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 수요형 기능의 제공을 위한 근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역의 행복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토대 구축 및 객관적인 지표 및 지수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행복도를 활용하여 재정지원 및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증대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위한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성과 범용성이 높은 지표의 구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높은 지표 구성이 필요하다.

〈행복의 구성 요인〉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지역행복도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 행복도지수 해외 사례

행복지수는 국가간 비교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평가에 주로 활용되던 경제력 및 경쟁력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관점에서 시행되었다. 삶의 질 및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기존 사례는 Mercer의 Quality of Living Survey, IMD의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Mori재단의 Global Po-wer City Index, EIU의 Global City Competitiveness Index 등이 주요 사례로 활용된다. Mercer 지수로 알려진 Quality of Living Survey 460개 도시를 대상으로 정치, 사회, 경제, 사회문화,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여가, 소비재, 주택, 자연환경 등 10개 분야 39개 지표를 이용하여 도시 간 삶의 질을 산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글로벌 우수성을 증대시키는 요소를 파악하여 해외 주재원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 평가되었다. IMD의 국가경쟁력지수는 '12년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 정부행정 효율, 기업경영 효율, 발전인프라 4개 분야 343개 항목을 조사하여 경제성장의 관점을 확장한 번영의 의미로 국가경쟁력을 제시함으로써 단기적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삶의 질, 환경보호,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모리기념재단의 Global Power City Index는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하에서 도시의 '종합적인 파워'를 평가하고, 순위선정을 위해 개발하였으며, 도시기능과 도시 주요 행위자에 따라 다면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경제, 연구 · 개발, 문화교류, 거주 적합성, 환경, 접근성 등 6개 분야, 38개 세부항목, 70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EIU의 Global City Competitiveness Index는 '11년 기준 120개국을 대상으로 서로 배타적인 8개 분야(경제적 역량, 인적 자본, 기관 효율성, 금융 성숙도, 글로벌 호소력, 물리적 자본, 사회적 · 문화적 성격, 환경적 · 자연적 위험)와 31개 개별지표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도시의 시장 경쟁력 파악 및 향후 성장의 기회와 인재 발굴을 위해 활용되었다.

반면, 행복지수에 대한 대표적인 기존 사례로는 UN Happiness Report, Sarkozy Index, Cameron Index, 부탄행복지수, Better Life Initiative, EIU's Livability Ranking 등이 대표적이다. UN Happiness Report는 156개국의 15세-60세 1,000명-3,000명 6개 핵심변수를 대상으로 행복과 인생의 평가기준으로서 행복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행복을 조사함으로써 Easterlin's paradox을 고려한 행복 정도를 제시하였다. 영국 통계청 ONS에서 PM's Happiness Index라고 지칭하는 카메론(D. Cameron)지수는 GDP 외의 국가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웰빙에 대한 새로운 지표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파악하여 제시하였으며, 주관적 및 객관적 방법을 혼용함으로써 What things in life matter to you? What is well-being? 와 Which of the things that matter should be reflected in measures of national well-being?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별, 계층별, 성별 표본으로 분류하고 인구통계조사(APS)를 활용하여 10개 영역 41개 지표로 구성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Sarkozy Index는 GDP의 대안지표로 영토 내 16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건강, 교육, 시간활용, 정치참여와 지배구조, 사회적 연결, 환경, 개인의 안전, 경제적 안정 8개 요인에 대한 스티글리츠식 행복지수를 제안하였다. 부탄의 Gross National Happiness는 Jigme Singye Wangchuck 국왕, 부탄 왕실, 그리고 부탄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2006년 GHI를 개발하였으며,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350명을 표본으로 pilot survey 실시 후 약 8,000명을 대상으로 9개의 핵심 영역에 대한 공식조사로 행복 정도를 파악하여 GDP가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를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OECD의 BLI는 GDP 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 주목하고 행복지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OECD 34개 국가간 비교 가능한 11개 영역에 대한 점수로 산출하여 행복도 지표를 발표하였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Livability Ranking은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산업 및 규제 환경, 인적 자본의 질, 삶의 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세계 141개 도시를 대상으로 연 2차례 World Bank 자료 중 사회안전, 의료서비스, 문화 · 환경, 교육, 인프라 구축 5개 분야, 30개 지표를 활용하여 최고 및 최악의 생활조건을 평가하였다.

■ 행복도지수 개발의 시사점

행복도지수 외의 기존 지표의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삶의 질 지수, 경쟁력지수, 지역발전지수 등으로 파생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 지수 및 지역경쟁력 지수 등에서 고려하고 있는 지역민 및 지역의 삶의 질 증대 및 경쟁력 증대와

〈대표적인 행복지수 해외사례〉

OECD BLI	UN Happiness	Sarkozy 지표	Cameron 지수	부탄 행복지수	Mercer 지수
공식통계	설문조사	설문+공식통계	설문+공식통계	설문+공식통계	설문+공식통계
•주거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주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여가 양분	•1인당 GDP •사회적 연력, 유대 •건강한 사회 •삶의 선택 자유권 •관대함 •부패에 대한 인지	•생산성과 •경제적 삶의 질 •전반적인 삶의 질 •(현재와 미래에 대한)지속가능정도	•만족(배우자,이웃) •건강 •What we do(고용) •Where we live •Personal finance •Edu & skills •Governance •Economy •Natural Env	•정신적 WB •건강 •교육 및 여가 •문화다양성 및 회복 •시간활용 •거버넌스 •지역사회활력 •생태 •건강수준	•정치/사회 •경제 •사회문화 •의료 및 보건 •학교 및 교육 •공공서비스 및 교통 •여가 •소비재 •주거 •자연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지역행복도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더불어 주관적인 지역민의 행복도를 포함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하며 대표성이 있는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측면을 주로 고려한 Mer-cer Index 등의 삶의 질 증대 지수, 그리고 지역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측면을 고려한 IMD, WEF의 경쟁력지수와의 차별성 증대가 필요하며, 경제성장에 대한 관점에서의 경쟁력 파악 및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상태를 평가하는 living standard 측면에서 탈피하여 삶의 질, 환경,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포함하고 종합적으로 지속성장을 의미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민수요형 지표가 요구된다.

또한,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낮은 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신적 · 영적 · 종교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심리상태를 수치로 계산하여 각종 정부 정책이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이나 이슈에 대하여 자원배분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복도지수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지수 개발 후 여러방면에서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통적인 가중치 방식에 대한 논란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지수의 도출에 있어 전통적인 가중치 방안 외 지속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단일지표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Dashboard 방식, 복합지표 방식, 조정된 GDP(adjusted GDP) 방식, 순저축(Adjusted Net Saving, ANS) 접근방식 등의 다양한 방법론 활용이 고려될 수 있다. 가중치에 대한 방식은 동등 및 차등 가중치를 활용하여 지수의 도출이 이루어졌으나 각각 가중치가 갖는 한계점은 상호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현실적인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가중치의 조사 및 적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경상북도에서 만나는 조선의 모습



시간이 멈춘 마을, 경주 안의 조선, **경주 양동마을**

'경주' 하면 불국사, 수학여행의 메카, 해외 신혼여행이 붐처럼 일지 않았을 때는 신혼여행으로 많이 찾았던 국민관광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방문했을 경주, 그래서 누구나 경주에 가지고 있는 추억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추억이 '신라'로 바로 연결되는 간단한 공식만 늘 남아있다.







간단한 공식 속 경주에는 화려한 통일신라 문화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조선 시대 양반 가문의 전통과 예스러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양동마을이 있다. 한국의 역사 마을 중 안동의 하회마을과 함께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은 세월을 뛰어넘은 거짓말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경주 시내에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설창산 줄기에서 내려오자마자 고색창연한 기와집과 소박한 초가집, 호젓한 돌담길 행렬이 눈앞에 펼쳐진다. 무척 잘 정돈된 돌담과 대문, 그 안에 자연이 잘 가꿔진 민속촌을 연상케 하지만 양동마을과 선조가 남기고 간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양동마을에는 국보 1점, 보물 4점을 비롯해 총 24점의 문화재가 있다. 게다가 마을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양동마을은 일 년 내내 지붕에 초가를 얹고 한옥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한다. 모든 것에서 재래식 방식을 따르는 양동마을의 주민들은 그 삶이 불편할 법도 하지만 오로지 전통을 지키는 것에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지며 지낸다.

양동마을의 시작은 기원전 4세기 이전으로 15세기 중반 경주 손씨가 류복하 무남독녀와 결혼해 양동으로 이주하면서 지금의 조선 시대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양동마을은 외손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남자가 처가살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여주 이씨와 경주 손씨 가문 400여 세대가 마을을 지키며 양반 가문의 자존심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양동마을은 이미 스크린을 통해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많이 찍기도 하였다. 영화 취화선, 내 마음의 풍금, 혈의 누, 스캔들 등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배경 하나 하나가 영화의 몰입도에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대상을 잘 표현해주는 고풍스러운 가옥과 정자들이 많이 밀집된 양동마을은 영화인들에게는 인기 장소이다. 스크린에서 다 담지 못한 단편의 기억들보다 더 큰 스케일을 자랑하는 양동마을, 조선 시대 한옥의 향기에 취해 돌담길을 거닐어보자.

조선시대 선비의 문화와 숨결을 느낄수 있는, **영주 선비촌**

경북 영주 순흥면에는 '선비촌'이라는 마을이 있다. 경북지방의 유서 있는 고택을을 그대로 본떠 만들어 놓았다는 이곳엔 경북 유형문화재인 두암고택, 만죽재 고택, 해우당 고택, 김문기 가옥, 인동장씨 종택, 김세기 가옥 등이 재현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택들을 떼어다가 한 자리에 모아둔 것처럼 옹기종기 모여 있어 이곳의 풍경은 마치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착각이 든다.

선비촌의 대부분의 가옥들은 숙박과 전통생활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민속촌과는 그 급을 달리한다. 각 가옥마다 현재까지도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듯 가재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어 실감이 나는데, 상류층, 중류층, 서민층 3단계로 등급이 나뉘어져 각각의 격차가 느껴져 보는 맛이 다르다. 마당엔 외양간과 소모형, 행랑채에는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의 밀랍인형들, 양지바른 뒷마당엔 옹기종기 장독들이 모여 있다. 부뚜막에는 무쇠솥과 마당 한편에는 약탕기와 맷돌, 키, 낫, 소쿠리 등의 농기구들이 놓여 있다. 돌담위에는 호박넝쿨도 볼수 있다. 흙길로된 마을 골목길은 돌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다.

선비마을에서 숙박을 하면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청사초롱의 풍경을 볼 수 있다. 가을에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 채워지고, 읍내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라 별도 무척 밝게 빛난다. 숙소의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조성되어 어린 아이들도 거리낌 없이 이용가능하며, 숙박료도 저렴한 편이다. 저자거리에는 토속음식점과 대장간, 공방, 기념품점 등이 있다. 지역 특산품인 인삼요리를 비롯하여, 한우, 사과요리 등 전통음식을 선보이고 국궁과 은장도, 짚공예, 한복, 복조리, 문방사우 등의 제작 시연과 줄타기 공연, 새끼 꼬기와 가마니 짜기 등도 볼 수 있다.




선비촌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민속놀이체험으로는 널뛰기, 투호, 연날리기, 제기차기, 팽이치기를, 선비체험으로는 탁본뜨기, 붓글씨쓰기, 다례, 예절교육을, 전통문화체험으로는 화전놀이, 짚공예, 전통복장 입어보기, 전통혼례, 부스럼 깨기 등을 해볼 수 있다.

현대의 발전되고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주 선비촌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조선시대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며, 시공간을 넘어 과거 우리 선조들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이시대의 소중한 공간이다.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제1회 「지방자치의날」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일　　시 / 2013. 10. 29(화) 14:00 ~ 17:00
장　　소 / aT센타 그랜드홀(5층)
주최·주관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aT센타 그랜드홀(5층)에서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동주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희망의 새 시대,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략)가 개최되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3.0지원센터소장이 각각 발표했다. (좌측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이승종 원장, 라휘문 교수, 금창호 소장, 이원희 교수)

일본 미토시장 대담

일　　시 / 2013. 10. 8(화) 14:00
장　　소 / 일본 미토시장실
대　　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미토시장

2013 기본연구과제 최종보고회 개최

일　　시 / 2013. 10. 10(월) ~ 10. 14(화)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산시 MOU 체결

일　　시 / 2013. 11. 12(화) 11:00
장　　소 / 서산시청 대회의실
참　　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산시장, 서산시의장 외 95명
내　　용 / 서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지원 MOU 서명 등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 2013. 11. 20(수) 13:30 ~ 17:30
장　　소 /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여의도)
주　　제 /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서울신문
후　　원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일본 총무성, 주한일본대사관, 국제교류기금
기조강연 / 한국 : 임수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前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일본 : 이이즈미 카몬 (일본 전국지사회 부회장/도쿠시마현 지사)



인문사회분야 연구능력 첫 분석

인문사회분야 연구능력 분석(동아일보, 2013.09.23. A4–A5면) 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학' 분야 상위 7위로 랭크되었다. 이 분석은 동아일보와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10년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논문과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산출한 연구능력 상위 100위 이내 연구자들의 지수를 합한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

발간물

● **「지방자치 Focus」 11월호 발간**

제　　목 / 북한 이탈주민과 사회통합
저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석주 연구위원



KRIIA 교육연수

● **제2기 주민행복 마을만들기 과정**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11. 6 ~ 11. 8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주민참여 활성화 과정**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11. 20 ~ 11. 21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3기 주민자치센터 과정**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12. 4 ~ 12. 6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3기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과정**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11. 13 ~ 11. 15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2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과정**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11. 27 ~ 11. 29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담당자 : 김유숙 / 02–3488–735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